

“尹 체포영장 엄정 집행... 문 잠그면 공무집행방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발부
공수처장 “유효기간 6일까지 집행”
“경호처에 공문...반대시 적법 절차”
“수사권 논란, 법원 결정으로 종식”



오동운 공수처장이 2025년 새해 첫 날인 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 왔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

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집행 시점에 대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에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 저희들은 큰 소리가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를 묻는 질문엔 “이미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했다.

오 처장은 “큰 반발이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며 “(경호처 측의)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영장 집행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

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권에 당부도 했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라는 바다”고 말했다.

경찰 기동대와 서울경찰청 산하 경호경찰부대인 101경비단, 202경비단 간 대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단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 경비단은 원소속은 경찰일 수 있지만, 경호처의 지위를 받는다”며 별개 소속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남 에너지주권 지키자’

1면서 계속 실제경기도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한창이나,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전력도 수도권 전체의 최대 전력수요인 40GW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장을 짓고도 전기가 없어 가동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RE100’ 이행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연계를 통한 대규모 전력수요 지방 이전 및 클러스터 조성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극복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분권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 각종 송배전망 확충 및 별도 국가 재정투입 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진정한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8인 체제 가동...尹 탄핵심판 ‘가속도’

최, 2명 임명... 野 추천 1명 보류
여야 강한 유감... 유불리 쟁점도
심리·선고, 정당성 논란 해소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55·27기)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

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업무 부담을 떠안아 왔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8인 체제’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 정당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사건 등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

판관 임명을 촉구해 왔다. 3명이 공식인 상태에서 심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이유에서다.

앞서 헌재 측은 31일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최 권한대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데 대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흐드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일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6인 체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탄핵 심판의 시기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유불리를 따지는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관측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윤 체포 집행, 최 대행·경호처 협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

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과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가진 최 대행에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준준 경호처장을 거명하며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안가 회동’의 연략책을 한 책임도 가법지 않다”고 압박했다.

이어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지도부, 새해 첫 일정 현충원 참배

무안 찾아 유가족 위로도
이재명, 광주 분향소 헌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임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호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고 썼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 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날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

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안정 국가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무안으로 다시 내려와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나흘째인 이날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민주당 민형배, 조인철, 양부남, 이해식, 김태선 의원이 동행했다. 헌화·분향을 마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이승에서의 변함없다’고 적어내고 편히



권영세(왼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뉴스

잠드소서’라고 글을 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는 참사 첫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광주와 무안을 찾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